생명안전
후퇴/개악
윤석열퇴진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투쟁 | 교육지

2023년 10월 13일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 www.nodong.org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50인(억) 미만 적용 연기 앞세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및 무력화 분쇄 10만 서명운동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11월국회 시동

노동시간 개악, 화물안전운임제 폐지, 마트 일요일 의무 휴업일 폐지, 건설노조 탄압등 노동자의 생명안전 후퇴, 개악을 지속하는 윤석열 정권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이 11월 국회에서 본격 추진된다.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악, 전문가 TF 발족으로 <처벌 완화, 경영책임자 의무 완화, 적용유예 연장>을 추진해 왔다. 연속적인 중대재해 발생과 노동자 시민의 반대로 주춤거리다, <50인(억) 미만 적용 시기 연장 원 포인트 법안>을 여당이 발의하고, 총선을 앞둔 정치적 거래를 선언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적용 연기를 위해 연말 국회 처리에 시동을 건 것이다. 10월 12일 국정감사에서 노동부 장관도 적용 연기를 시사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무용론이 넘쳐나던 보수 경제지는 '적용 연기'를 기정 사실화하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50인(억)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80%, 10년간 1만2천45명 사망

[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연도별 자료]

년도	산재사망	50인 미만	사고사망	50인 미만
2022	2,233	1,372	874	707
2021	2,080	1,359	828	670
2020	2,062	1,303	882	714
2019	2,020	1,245	855	660
2018	2,142	1,285	971	745
2017	1,957	1,148	964	736
2016	1,777	1,077	969	705
2015	1,810	1,062	955	702
2014	1,850	1,078	992	717
2013	1,929	1,116	1,090	782
계	19,860	12,045	9,380	7,138

정부 통계만으로도 지난 10년간 50인(억)미만 사업장 산재사망 노동자는 12,045명. 업무상 사고 사망은 7,138명이다. 최근 3년 업무상 사고 사망은 전체의 80%에 달한다. 정부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불법이 판을 치는 중소 사업장 산재사망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다시 내 팽겨쳐질 위기에 직면했다. 법 제정 이후 3년이 지났는데, 또 다시 연기 주장은 법 회피를 위한 억지에 불과하다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쌍끌이 전략
늑장수사 기소, 작은 사업장 적용 연기

법 적용 대상 중대재해가 400건이 넘었으나, 9월말 기준 노동부 기소 의견 송치는 83건, 검찰 기소는 25건 뿐이고, 불기소한 5건은 사유 공개조차 거부하고 있다. 건설노조 탄압에는

압수수색, 구속을 남발하던 검찰은 DL이엔시 7건, 롯데건설, 현대건설 5건, 철도공사 4건, 세아베스틸 3건 등 연속으로 중대재해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

법 적용 연기는 단순한 시기 문제가 아니다. 대기업 중대재해는 시간 끌기와 불기소 남발로, 중소기업 중대재해는 적용연기로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을 사문화 시켜 법을 무력화 하는 쌍끌이 전략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연기되면 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를 했던 중소기업에게는 신뢰를 잃고, 인명을 경시하고 법 적용을 회피했던 기업에게 버티면 된다 라는 인식이 확산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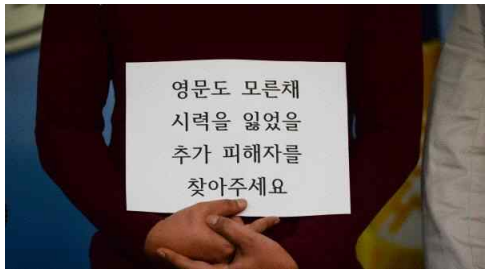
안전 법령 위반 사상 사고 처벌에 적용 시기 차등 국내외 사례 없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망에 대한 형사처벌은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유예나 차등 적용은 없다. 안전법령 위반 사상에 대한 처벌이 있는 국내법령도, 중다재해처벌법과 유사한 외국법령도 차등 사례가 없다.

법명	사상 사고 처벌
환경범죄단속법	무기 또는 5년 이상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무기 또는 5년 이상
연구실 안전환경법	3년 이상 10년 이하
산업안전보건법	7년 이하 (사망 시)

중대재해처벌법보다 높은 하한형을 규정한 국내 법령도 규모에 따른 적용유예나 차등 적용은 제정 초기부터 없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시기를 2년 유예했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오히려 예외적인 사례이다. 법을 위반해서 죽거나 다쳤을 때 처벌의 문제는 생명과 안전이라는 기본 가치의 문제라는 반증이다.

메탄올 7명 실명 세일전자 화재 9명사망 낮은 처벌과 피해보상



2015년 인천 부천 지역 공단의 소규모 핸드폰 부품업체에서 일하던 청년 노동자 7명이 실명을 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당시 노동부는 일체 점검을 했으나, 한 업체는 감독을 나온 노동부를 속이고 숨겨둔 메탄올을 사용하여 실명에 이르게 했다.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은 것은 별도의 소송으로 4년이 지난 뒤였다.

2018년 9명의 노동자가 화재로 사망한 세일전자는 수년간 소방시설 오작동을 알고도 방치하고, 경보기를 꺼 놓고, 소방시설 점검도 형식적으로 진행했다. 더욱이 2016년에도 화재사고가 발생했었으나, 재발방지는커녕 화재보험금을 부풀려 보험금을 가로채는 사기행각이 적발되기도 했다..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친 세일전자 대표에 대해 법원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며 금고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처벌은 여전히 평균 벌금이 500만원 내외이고, 실형 선고는 2%미만이다.**

적용 시기 연장은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대책 전체를 포기하는 것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경영책임자 의무는 예방체계 구축뿐 아니라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이행, 정부 행정기관의 감독 시정조치 이행, 안전보건 법령 준수, 안전교육 실시 점검 및 이행> 등도 규정되어 있다. 법 적용이 연기되면 화학물질 관리가 안 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부의 사용금지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진 피해자들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어렵게 된다. 세일전자와 같이 2016년에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보험금 사기로 자기 이속만 챙기고, 또 다시 화재가 발생한 기업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제2, 제3의 세일전자 대표이사가 나오게 된다. 2024년 법 시행을 계기로 중소기업에 집중되었던 예산 지원과 중대재해 감축 대책 자체가 무력화 된다. **대기업은 검찰이 봐주기로 버티고, 중소기업은 적용연기로 버티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무력화 되고, 일시적으로 반짝하던 현장의 재해예방 투자와 노동조합의 참여, 현장 개선도 원점으로 되돌아 가게 된다.**

쪼개기 계약, 특수고용으로 너도 나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를 적용기준으로 하면서, 제조업까지 확산 된 쪼개기 계약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특히 **원청이 50인 미만이면서, 수 백명의 노동자를 특수고용으로 고용한다면 법 적용대상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특수고용등 노무제공자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원청에 부여한 예방 취지가 실종되는 것이다. 특수고용 노동자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 조항도 해당되지 않아, 날로 증가하고 있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중대재해 예방대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가능하다 59.2% 2개월 뒤에는 준비 못했다 80% ??? 경영계 답정너 실태조사로 여론 호도

여당의 적용연기 원포인트 법안 발의 직전에 보수 경제지가 집중 보도한 것은 중기중앙회의 실태조사 결과로 소규모 기업의 80%가 준비 부족으로 연기를 요구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같은 기관인 중기 중앙회의 2개월 전 조사에서는 법 준수가 가능하다는 응답이 약 60%에 달했고, 준비가 안 돼 연기가 필요하다는 사업장의 적용 시기도 1년 연기가 41.2%로 가장 많았다.

구분	6월 조사	8월 조사
법 준비	법 준수 가능 59.2 % 전혀 불가능 3.2 %	준비하지 못했다 80% 아무 준비 못했다 29.7%
적용시기	법 준수 가능 제외 1년 연기 41.2%	연기 필요하다 85.9%
조사대상	제조,비 제조 각 50% 수도권, 전국 각 50%	제조업 93%
응답자		대표이사 41% 임원 23%

같은 기관의 널 뛰는 조사결과는 조사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8월 조사는 93%가 제조업이었고, 응답자의 41%는 대표이사, 23%는 임원이었다. <답정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기업이 소유주인 보수 경제지, 언론을 통해 <적용 시기 연장 대세론>을 의도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경총은 정부에 제출한 중대재해처벌법 건의서에서 <위험성 평가 처벌 조항 도입 시기인 2년 뒤

적용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작 위험성 평가 처벌 조항 도입은 반대하는 앞뒤 안 맞는 궤변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자. 시민, 전문가 중대재해 처벌법 강화 필요하다.
5인미만 적용 필요77.1%
중소기업 80% 중대재해 처벌법 찬성.

경영계와 보수 언론의 중대재해처벌법 때리기, 무용론 언론 공세에도 노동자 시민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찬성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월등히 높다. 2022년 9월 국회의장실과 헤럴드 경제 조사에서도 법을 강화해야 한다 53.9%, 완화해야 한다는 17.6%에 불과했다. 2023년 한국 비정규 센터 조사에서도 법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 82.2%, 처벌 수위 완화 반대가 72.5% 였다. 중대재해 전문가 넷에서 안전보건 전문가 612명 대상 조사에서는 현행 법 처벌이 부족하다가 47.4%, 5인미만 사업장 적용에는 77.1%, 중대시민재해 대상 확대에 81.4%가 찬성했다. 2022년 10월 한국 갤럽이 중소기업 1,000곳 대상 조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찬성이 80%였고, 찬성 이유로는 하청에 책임 떠넘기는 행위 방지가 가장 높았다.

자본과 윤석열 정권이 추진하는
50인(억) 미만 적용 연기는
법을 무력화하는 쌍끌이 전략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원 포인트 법안 발의로 정치적 거래를 추진하고, 민주당은 총선의 유불리를 따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앞장서고,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개악과 무력화를 반드시 저지합시다!

10만 노동자 시민의 힘으로 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적용 연기 10만 서명운동과 대중 투쟁으로 분쇄합시다

10만 서명운동 민주노총 지침

- 단위 사업장 교육지 부착
- 중식, 안전교육 시간 동영상 상영, 선전물 게시
- 조합원 서명운동 전개
- 11월 11일 전국 노동자 대회 상경 차량 및 집회 장소 등 각종 집회, 행사 서명운동 전개
- 생명안전행동 등 시민사회와 대시민 서명 운동 전개

○ 시기 : 10월 16일 ~ 11월 16일
○ 방식 : 온·오프라인 서명
○ 서명지, 교육선전자료 민주노총 홈페이지 게시
○ 온라인 서명 링크 :

bit.ly/중대재해처벌법개악분쇄10만서명